Vol.81 2022. 05. 12

Global Insight

한국 vs. G5 조세체계 비교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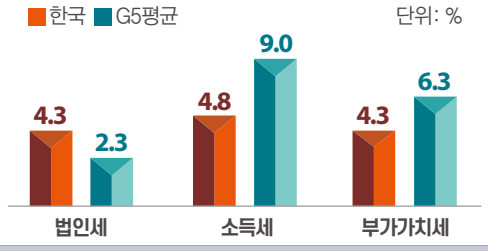
-한국 3대 세목(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중심으로-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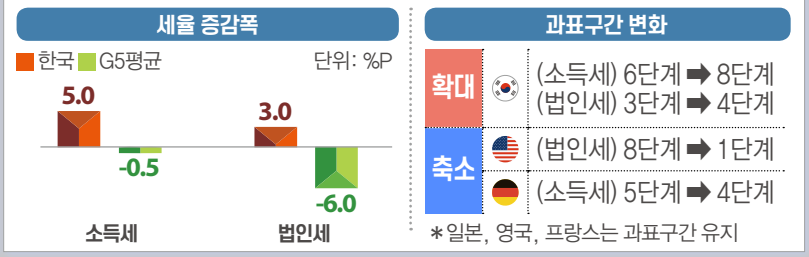
세부담구조 한국은 G5 국가 대비 법인세 부담 높고, 소득세·부가세 부담 낮은 구조

조세동향 한국은 소득·법인세 과세 강화 vs. G5 국가는 과세 완화 혹은 유지

조세부담(GDP 대비 세수비중) 구조('19년)



한국 vs. G5, 소득·법인세율/과표구간 변화 추이('17년 대비 '21년)



*주: 조세부담(GDP 대비 세수비중)의 가용 최신 통계는 '20년이나, 코로나19 영향(ex.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수 급감 등) 배제를 위해 '19년 기준으로 비교
*자료: OECD, PWC tax summaries 등

한국 조세체계 문제점 ①국민·기업 세부담 증가속도 빠르고, ②고소득층에 조세부담 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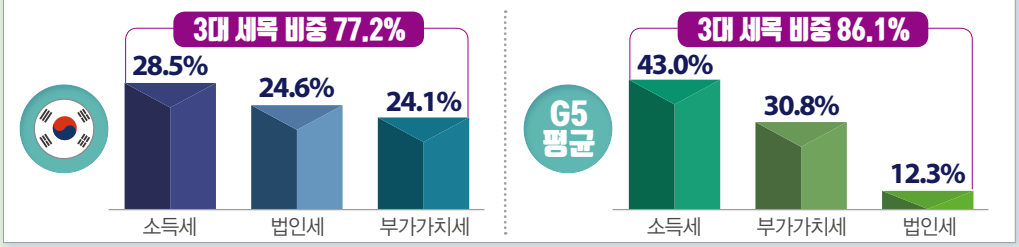
과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통해 조세경쟁력 높여 경제성장과 안정적 세수 확보 도모

3대 세목의 중요성

3대 세목은 한국 및 G5국가 세수 대부분을 구성하는 핵심 세목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세) 세수는 국내 전체세수(국세)의 77.2% 차지
*G5(평균)의 전체세수 대비 3대 세목 세수 비중도 86.1% 수준

한국 vs. G5 전체세수(국세) 대비 3대 세목 세수 비중('19년)



* 주 1) 가용 최신 통계는 '20년이나, 코로나19 영향(ex.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수 급감 등) 배제를 위해 '19년 기준으로 비교
2) G5 평균 부가세수 비중은 미국(부가가치세 미부과)이 제외된 수치
* 자료: 국세통계,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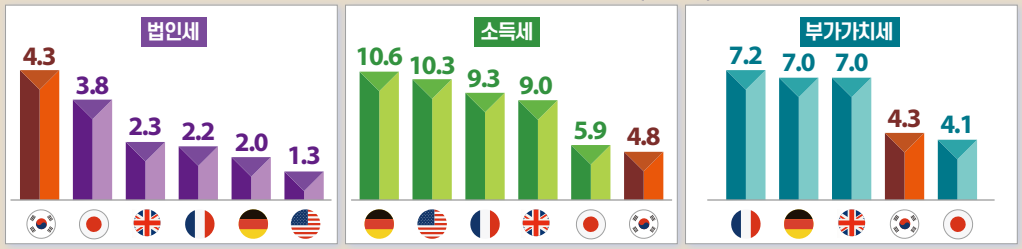
한국 vs. G5, 3대 세목 과세체계 현황 및 동향 비교

1 조세부담(GDP 대비 세수 비중) 구조

❖ **법인세** 한국 4.3% 〉 G5평균 2.3%, **소득세** 4.8% 〈 9.0%, **부가세** 4.3% 〈 6.3%

한국은 주요국 대비 법인세 부담 높고 소득세·소비세 부담 낮은 구조

한국 vs. G5 3대 세목별 부담률('19년)



*주 1) 가용 최신 통계는 '20년이나, 코로나19 영향 배제를 위해 '19년 기준으로 비교
2) 미국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 비교 대상에서 제외(이하 본문에서 동일)
*자료: OECD

2 세율(중앙정부 기준) 및 과표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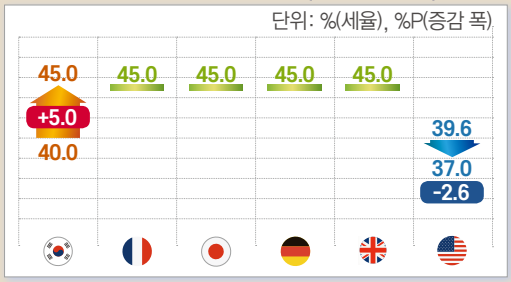
※ 세율·과표구간은 경기 여건 등에 영향을 받는 변수가 아닌 조세정책의 일부이므로, 최신 현황('21년)을 기준으로 비교

❖ **소득세** (최고세율) 한국 45.0%vs.G5평균 43.4%, (과표) 8단계 vs. 5.2단계

*최근 5년('17~'21년) 간 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 및 과표구간을 단계적으로 인상&확대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소득세율 인상, 과표구간 확대

소득세 최고세율 변화('17~'21년)



*주: '17년 대비 '21년 증감 폭, *자료: OECD

소득세 과표구간 변화('17대비 '21년)

	'17년		'21년
	6단계	➡	8단계(+2)
	7단계		
	5단계	➡	4단계(△1)
	3단계		
	5단계		

*자료: OECD, PWC tax summaries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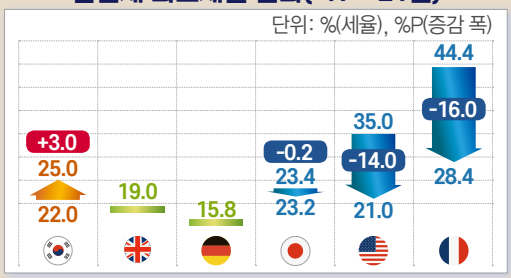
❖ **법인세** (최고세율) 한국 25.0%vs.G5평균 21.5%, (과표) 4단계 vs.1단계

*한국은 '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0➡25.0%) 및 과표구간(3천억원 초과) 신설

G5와 달리 한국은 법인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확대

*OECD 38국 중 4단계 이상 과세체계 운영 국가 한국 유일 (국회예산정책처)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17~'21년)



*주: '17년 대비 '21년 증감 폭, *자료: OECD

법인세 과표구간 변화('17대비 '21년)

	'17년		'21년
	3단계	➡	4단계(+1)
	8단계	➡	1단계(△7)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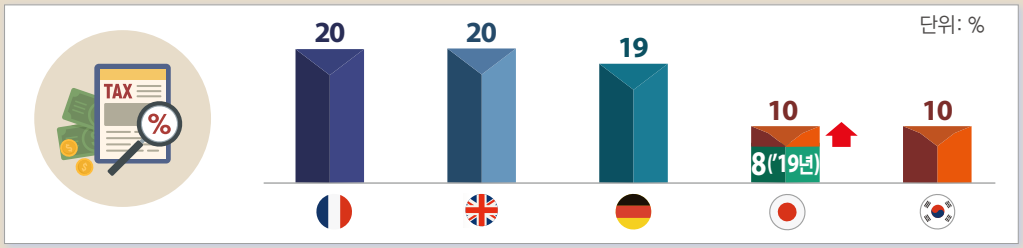
*자료: PWC tax summarie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부가가치세** (세율) 한국 10% vs. G5평균 17.3%, (과표) 한국·G5 모두 단일세율

*일본은 '19년 부가가치세율을 8➡10%로 인상, 그 외 국가는 기존 과세체계 유지

G5와 한국 모두 부가세 단일세율 체계 및 세율 유지(일본 제외)

한국 vs. G5 부가가치세율('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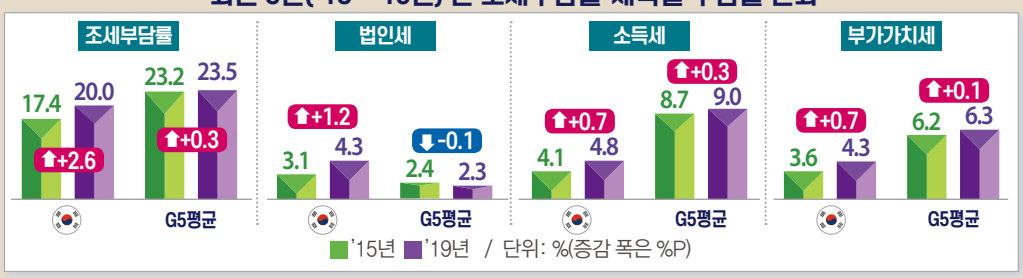
*주: 미국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별로 판매세(Sales tax) 및 이용세(Use tax) 차등 부과
*자료: OECD

G5 국가와 비교한 한국 조세체계 문제점과 조세개혁 방향

❗ 국민·기업의 조세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민간 활력을 저해

지난 5년 간 세율 인상 영향으로 소득·법인세 부담 빠르게 증가

최근 5년('15 ~'19년) 간 조세부담률·세목별 부담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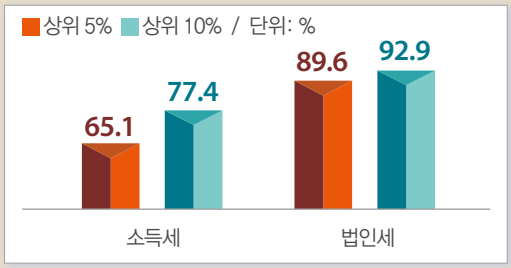
*주1) 조세부담률 = GDP 대비 총세수 비중, 세목별 부담률 = GDP 대비 해당세목 세수 비중
2) 가용 최신 통계는 '20년이나, 코로나19 영향 배제를 위해 '19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비교
3) 세율 유지에도 부가세 부담률이 증가한 이유는 물가 상승 등 경기적 요인과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기준금액 확대('14~'15년) 등 정책 변화로 인한 부가세수 증가에 기인
*자료: OECD

소득계층·기업규모별 조세부담 격차 크고 면세자 비중 높아 국민개세주의와 조세형평성 저해

＊국민개세주의: 모든 국민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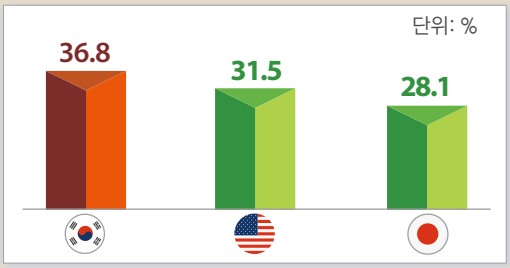
고소득자 · 대기업 세부담 비중 높으며, 면세자 비중 한·미·일 중 최대

한국 상위 10% 개인·법인 부담세액 비중('19년)



＊자료: 국세통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19년)



＊주: 유럽 국가는 통계 미제공으로 분석에서 제외
＊자료: 각 국가별 국세청 소득세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

세부담 합리화 통한 조세경쟁력 제고로 경제 성장, 세수 확충의 선순환 유도

세율 인하, 세원 확대로 조세경쟁력 높여 경제성장 & 세수확보 실현해야

① 세율 인하로 국민·기업 세부담 완화 ➡ 경제성장 통한 세수기반 확충

＊법인세율 1%p 인하 시, 설비투자 3.6% 증가(한경연, '22.4), 성장률 0.1%p 증가(한국경제학회,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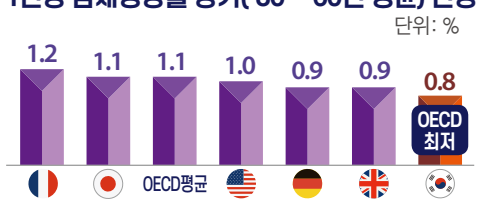
②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정비 통한 세원 확대 ➡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

＊세수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 위주 증세보다는, 비과세 · 감면 정비를 통한 면세자 축소가 우선

한국 중·장기 조세정책 여건(G5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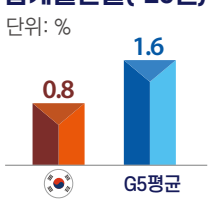
＊잠재성장률 하락속도 빠르고,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저성장 고착화 우려

1인당 잠재성장률 장기('30~'60년 평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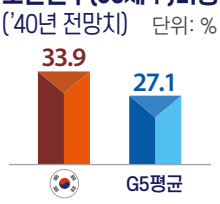
＊자료: OECD('21.10월)

합계출산율('20년)



＊자료: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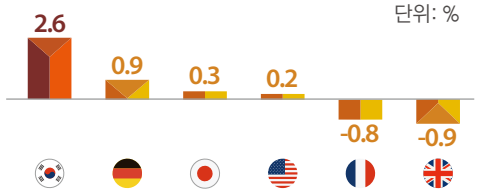
노인인구(65세↑)비중 ('40년 전망치)



＊자료: OECD('21.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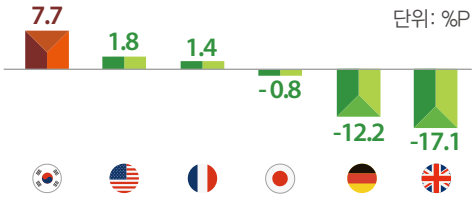
＊복지지출 등 증가로 재정수요 확대 불가피하나, 국가 재정여력은 부족

최근 5년('15~'19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증감폭



＊주: '15년 대비 '19년 증감 폭(일본은 '13년 대비 '17년)
＊자료: OECD

국가부채비율 증감 폭 전망('27년-'22년)



＊자료: IMF 재정모니터('22.4월)

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쟁점과 체크포인트

- 한국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여 소득·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과표구간을 확대함으로서 국민·기업의 세부담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고소득층에 세부담이 편중
-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을 극복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세율을 낮추고 세원을 넓히는('낮은 세율, 넓은 세원') 방향의 조세개혁 필요
  ＊경제성장 제고를 위해서는 세원을 넓히고(Broadening the tax base), 세율은 낮추는 (Lowering the rate) 조세개혁 방향이 바람직(OECD, '10년)

■ 내용문의: 경제정책팀 이상호 팀장(02-3771-0320), 한호 연구원(0426), 윤병완 연구원(0446)

글로벌 싱크탱크 FOCUS

TAX FOUNDATION

Policies Critical to Economic Recovery Set to Expire Soon

경기 활성화 위한 기업 세제혜택, 일몰기한 임박

Daniel Bunn,
2022. 5월

https://taxfoundation.org/business-tax-reform-expiring/

SUMMARY

주요국들은 경기 회복과 투자 촉진 목적으로 유형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투자세액공제 등)을 확대 시행했으나, 일몰기한 도래로 곧 종료될 예정

❖ 미국 보너스 감가상각(Bonus-Depreciation)주) 제도 도입('17년)
➡ '23년 이후 단계적 폐지 예정
*주) 자산 구입 첫해에 예년보다 높은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비용공제 규모 확대

❖ 영국 기계설비 투자액의 130% 소득공제(Super-Deduction) 허용('21년)
➡ '23년 일몰 예정

기업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감면 제도를 항구화하는 것이 바람직

❖ 한시적 인센티브는 기업 투자 증대보다는 기존 투자계획의 조기 집행만 유인

❖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전환, 코로나19發 디지털 전환 등으로 사업 구조 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의 관련 투자비용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 전망
➡ 세제혜택을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The Heritage Foundation

Record Number of Job Openings Shows Biden Policies Have Created Massive Labor Shortage

구인자 사상 최대: 바이든 정책이 부른 인력부족 현상

Heritage Foundation
2022. 5월

https://www.heritage.org/press/heritage-expert-record-number-job-openings-shows-biden-policies-have-created-massive-labor

SUMMARY

'22년 3월 기준 미국의 구인 공고(Job Opening)가 1,150만건으로 역대 최대, 구직자 1명 당 취업 가능 일자리 수1.94개

인플레이션과 인력부족 현상에 중소기업 임금·가격인상 불가피

❖ 기업 절반(49%)이 3월 임금을 인상, 28%는 향후 3개월 내 인상 예정, 3월 제품 가격을 올린 기업도 72%(NFIB, 중소기업 CEO 설문조사, '22.4월)

❖ 임금·물가 충격에 3월 중소기업 낙관지수(93.2)주) 작년 4월(95.7)來 최저(〃)
*주)중소기업 낙관지수(Optimism Index):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경기 낙관, 이하이면 경기 불황으로 판단

노동시장 미스매치 원인: 위드코로나로 인한 실적회복 기대로 인력 수요 증가 vs. 정부의 지나친 실업급여로 근로 유인 감소 및 노동 공급 위축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실업급여(50개州 평균 주당 387$)에 더해 연방정부가 주당 300$ 추가로 지급하는 법안(America Rescue Plan)에 서명('21.3월)